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008
----------	------

발의연월일 : 2025. 2. 7.

발 의 자 : 강선우 · 서미화 · 김 윤
김문수 · 남인순 · 소병훈
홍기원 · 이재관 · 김한규
조승래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감염병 관리 및 필수의료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문제와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역의사”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
- 나.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국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지역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지역의사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9조).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사”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의사선발전형”이란 지역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대학 입학 전형을 말한다.
3. “의무복무기관”이란 지역의사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는 기관·시설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역의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지역의사 양성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 ①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

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의료취약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를 말한다)의 분포, 의료기관의 수 및 부족한 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학비등의 지원) ① 국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5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하거나 유급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한다.

② 제5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학비등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퇴학 또는 자퇴한 경우

2. 해당 교육과정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질병, 심신의 장애,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복무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반환금의 납부,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무복무) ① 지역의사는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기

관에서 의무복무를 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② 지역 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는 경우. 다만,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필수의료분야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에는 그 수련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다만, 「농어촌 등 보건의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종사하거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보건의료인으로 복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한다.

3. 이 법 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의무복무 기간의 기산일, 산입방법 등 의무복무 기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공의 수련)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

려하여 지역 의사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역의사의 의무복무기관 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지역의사를 배치하고, 해당 지역의사 및 의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의 지정 및 지역의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지역의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해당 의무복무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른다. 다만,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의사의 의무복무기관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무복무기관의 변경 등) ① 지역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도 내에서 의무복무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도로 의무복무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의사를 다른 시·도의 기관·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감염병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의사를 해당 시·도 내의 다른 기관·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무복무기관 변경 및 파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의사의 겸직금지) 지역의사는 의무복무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의무복무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의무복무 실태 보고 등) ① 의무복무기관의 장은 지역의사의 근무실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사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와 관련하여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역의사가 이 법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사에 대하여 주거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무복무기관의 장은 의무복무를 완료한 사람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의무복무를 완료한 사람이 해당 시·도 내의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가 제7조를 위반하

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는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의사 면허의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가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6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역의사의 근무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